

» CONTENTS_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대전발전연구원 방문 | 학술·연구교류 협약 체결 | 연구원소식 1,2 | 협약체결기관 소개 | 어린이 교통안전 | 경제동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대전발전연구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 미래 대전기획 서밋포럼'이 9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인제 전 신한정수도건설 추진위원장과 이달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연숙 전 정부2장관 등 전직 장관급 인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일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래대전기획 서밋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과학벨트 거점지역으로 대전이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유치를 축하한다'고 전하였으며,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와 대전시가 마련해야 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j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대전발전연구원 방문



23일(목) 일본 후쿠오카아시아 도시연구소에서 대전발전연구원을 방문 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발전연구원과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간의 교류 협정 체결 후 연구교류 절차에 대한 논의와 후쿠오카 신 비전에 대한 대전발전연구원의 의견 청취 등 양 기관간 교류활동을 기졌다.

특히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마츠모토 이사장은 방문 소감에 대해 "후쿠오카시는 현재 종합계획의 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 종합계획의 개정을 위해 시민, 경제계, 주변 자치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함께 국내외 지식인으로 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도시발전에 대한 견식이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후쿠오카시 신 비전 책정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기 원장은 "후쿠오카시의 시장방침은 인민중심의 도시, 경제적 기반의 확충, 사회의 질이라는 측면을 고루 고려하면서, 또한 실현가능한 사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추후 일본을 방문하여 대전의 비전 및 마음만들기 현황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다. j

대전발전연구원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학술·연구교류 협약 체결 재난방재산업 학술·연구교류 강화기로 합의

대전발전연구원은 20일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와 대전광역시의 재난방재 및 안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맺고,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정보통신 기업군의 역량을 방재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차세대 지능형 방재산업의 신산업군을 창출하여 대전·충청 지역이 방재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재정보통신 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적용가능한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마케팅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방재정보통신지역 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대처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통합화하는 방재정보통신기술개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IT기술을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적용해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



<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이현태 센터장(좌)/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초청 전직 장관들 대전발전 의견 제시



전직 장관급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대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의 과학자들이 과학벨트에 관심을 갖고 국내외에서 물러들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며 대전이 그 중심에서 서시안별로 시기를 잘 조율해 추진해야 한다고 대전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시기별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공적 건설을 위해선 교육, 문화, 정주여건 등 소프트 웨어적 측면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집합체계를 심플하게 구축해 규제 받는 느낌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숙 전 정무장관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여성인력 활용이 낮다' 따라서 세계적인 과학강국을 만들기 위해선 여성과학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해 활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룡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형국책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선 현재 교과부 소속으로 돼 있는 과학벨트추진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구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3개 시도의 TF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제 전 신항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나 과학벨트 조성 지역내 학교, 문화, 예술의 기능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므로 모도시인 대전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확대,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희열 전 기초기술연구원 이사장은 '교과부 과학벨트추진위원회에 대전시 공무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외국과학자 유입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김대유 전 청와대경제수석은 사업 시행 첫 해 대규모의 재원 확보 필요성, 김형국 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과학벨트 조성의 명확한 목표 설정, 국제통용 표준화 용어 사용 등을 주문했다.

박상덕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 대전형성은 지문 위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라고 말하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모두를 신중히 검토, 수용해서 '한강의 기적에서 대덕의 기적'으로 이끄는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전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개소”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지원단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서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6월 9일부터 대전발전연구원에 설치 운영한다.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했을 때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그 제공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지원단은 대전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증진시키며, 민·관 연계 간담회와 지역 사회서비스 포럼을 꾸준히 개최하여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지원단은 효과적인 사회서비스를 통해 대전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사항은 대전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42-530-3591-5)으로 할 수 있다.

“대전·충남·충북발전연구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수도권 규제의 핵심정책인 공장 총량제와 대기업 입지규제 시책이 유명무실화 된 상황속에 충청권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13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 등 3개 시·도 연구원장,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 유환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연구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의 대응전략'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중부대 강현수 교수 대전발전연구원 김홍태 도시개발연구실장, 이상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대구경북 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한남대 정순오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채성주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따른 충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 아시아 5개국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지역간 상생전략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주제로 충청권 현안 논의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경제학회가 주관한 아시아 5개국 국제 학술세미나가 10일 오전 10시 한남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를 비롯 중국 절강대와 싱가포르대 일본 도쿄대, 태국 카셋사르트 대학 등이 참가하였으며, ‘지역간 상생전략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5개국 각국의 경험을 통해 동남권, 지역간 상생 전략을 도출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모색 하고자 개최되었다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육성전략 모색, 충남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전략, 충북 태양광특구 발전방안, 도농상생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농·공·상 협력 강화 방안대선, 충남, 충북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적 공간적 불균형 문제와대안적담론, 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산업 연계 및협력방안 등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부권 3개 시도인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의 현안과제를 다룸으로써 세미나가 중부권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d](#)



“ 2011년 제3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

여성(아동)의 안전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6월 22일(수) 14시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2011년 제3차대전가족공동체포럼을개최했다.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종사자, 여성복지 사업기관 및 여성복지 지원기관종사자 교수, 연구자, 공무원 등 여성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이진행되었다.

이번2011년 제3차대전가족공동체포럼의 주제발표는정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여성(아동)의안전관련 지역사회 거버넌스 현황 및 구축방안 토론회” 라는 주제로, 여성·아동 피해보호·지원서비스 선진화 및 시각지대 해소방안 선형연구의 결과에대해서 발표하였다.

김미순천주교 성폭력상담소소장은 “여성·아동이 행복한 명품 동작”이라는 주제로여성(아동)의안전과 관련한구체적 사례를제시해 주었다.

발표이후 김효수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과 순정애대전지역상담소 사설협의회)총무의 지정토론이 이어졌고, 이현숙(대전지역상담소 사설협의회) 대표가좌장을 맡아자유토론이 계속되었다

금번 포럼에서는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모색하고민·관의 협력을통한 통합적 서비스를구축함으로써 성폭력 및 폭력에 대한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하였다. 또한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남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이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의게기가 되었다. 포럼에대한 문의는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042-530-3550)로할 수 있다. [d](#)



“ 대전발전연구원-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학술·연구교류협약 체결 ”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소개

1 센터장

정보통신공학과/교수 이현태

2 사업기간

2008년 7월 ~ 2018년 6월(10년간)

3 목원대학교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RIC)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산업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RIC)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을 지원받아 대학-기업간의 신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성장잠재력과 혁신역량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4 사업개요

방재정보통신은 무선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의 IT기술을 방재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본 센터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대전·충청 지역의 정보통신 기업군의 실용적 역량을 방재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방재 분야와 정보통신분야의 융합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방재산업의 신산업군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합지원센터, 한국고주파연구소, 한국전지통신연구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60여개의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원대 교수 30여명이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센터활동 주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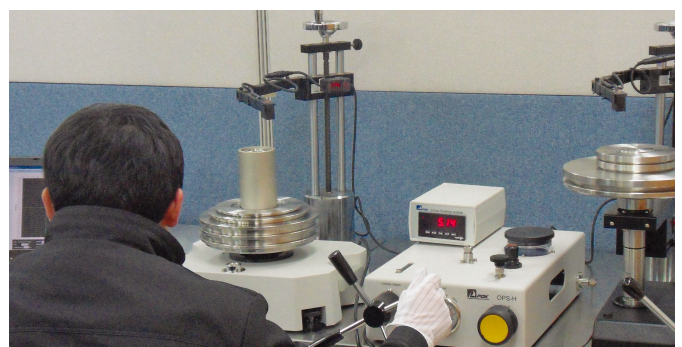
〈 방법 및 방재를 위한 안전사회 디자인 포럼 〉



〈 전문가 초청 세미나 〉



〈 방재정보통신 BIM교육 〉



〈 센터장비 사용 사진 〉

5 센터의 기업지원 업무



대표전화: 042-336-4800 홈페이지: www.podtre.kr

어린이 교통안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범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8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3.1명(전체 평균 1.8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이웃나라 일본은 0.9명 밖에 되지 않는다. 대전시의 2009년 어린이 보행 사망자 수는 2008년에 비해 3명에서 2명(동구, 대덕구 각각 1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으나) 부상자 수는 244명에서 250명으로 6명이 늘어났으며, 부상자는 서구가 90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려가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2011년 1월 19일 기준으로 368개소(초등학교 143, 유치원 175, 특수학교 4, 보육시설 46)가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건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연령대(만 14세 이하) 중 초등학생의 사망 및 부상사고가 전체의 49%, 46.8%로 각각 나타나 초등학생의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시설물,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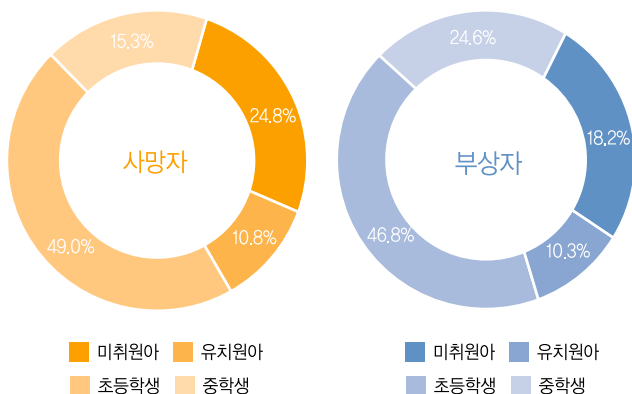


그림 11 학년별 어린이 사상자 구성비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어린이 안전 교육

어린이는 보행중 대체로 산만하여 차도로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보행시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녹색등화가 켜지자마자 뛰어가 등 위험한 보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에는 2010년 개관한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교통문화체험 센터가 있다. 그러나 다른 교통안전 체험센터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의 경우 유료로 운영되어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공공의 안전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교통안전법 개정 등을 통한 교통교육 의무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독일의 경우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많으며, 이러한 아이들이 교통안전문화 학습관에 오기가 힘든 관계로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의 필요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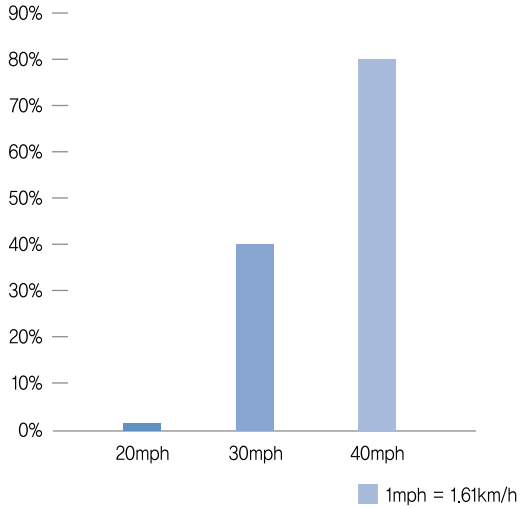
교통정온화 도입(Traffic Calming)

1980년대 이후 영국, 독일 등의 유럽을 시작으로 지구 교통관리의 기법으로 자리를 잡아왔으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교통억제기법은 물리적 교통억제 방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규제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제에 의한 교통억제기법에는 30km/h 최고속도 구역 규제, 횡단보도, 보행자용 도로, 주차금지 규제, 일시정지 규제, 교차로 마크 등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연구자료(U.K. 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속도와 교통사고의 경중과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4.4km/h(40mph)의 속도로 오는 자동차에 치였을 경우 85%의 보행자가 사망하였고, 48.3km/h(30mph) 속도의 차량에는 45%가 사망하였으나, 32.2km/h(20mph)에서는 단 5%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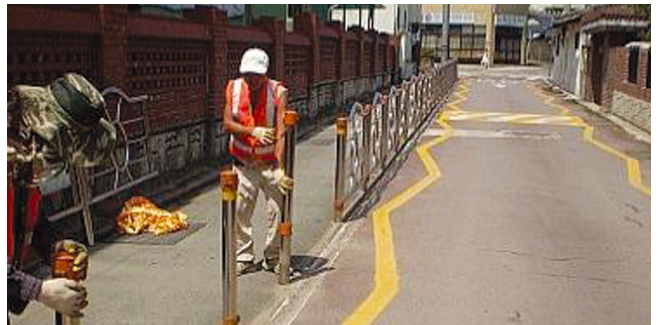


A pedestrian's chance of death if hit by a motor vehicle



〈 속도별 사망사고 비율 〉

속도를 규제하고 방어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이전에는 지그재그(Zigzag)로 표시하여 방어운전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차로폭을 좁히고, 대신 보도를 만들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하여 차로폭을 좁힌 사례 〉

또한, 방호울타리는 아이들이 차도로 나오지 못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뛰어넘지 못하도록 일정 높이를 유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붉은색 칼라포장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앞에 차량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 삽입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법중 하나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보행자는 대부분 어린이 이므로 횡단시간을 어린이의 보행속도인 0.8m/sec를 적용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노면표시 〉



〈 지그재그선 〉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예 〉



〈 붉은색 칼라포장 및 주의문구 삽입 〉



〈 물리적 교통정온화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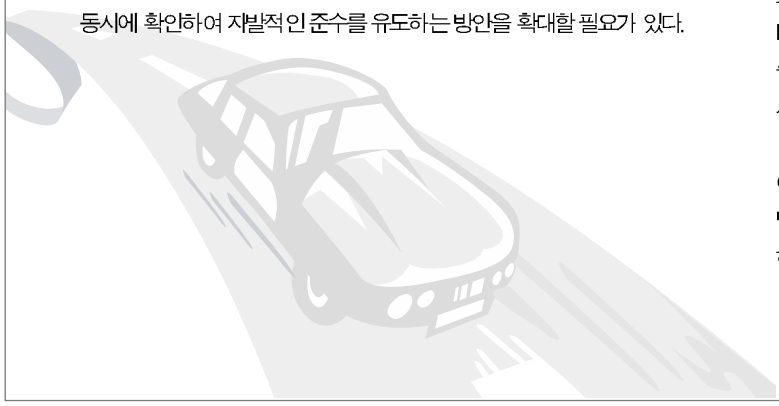
물리적 교통억제기법은 과속방지턱(사다리꼴, 활꼴, 이미지, 스피드쿠션 등), 노면 요철포장, 차도폭 좁힘(Narrowing), 교차로 좁힘, 사케인(Chicane), 교차로전면(全面) 과속방지턱, 볼라드(Bollad) 등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과속방지턱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사케인(Chicane)을 설치하여 도로를 S자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속도감소를 유도하거나 벽돌이나 석재와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하여 차량이 흔들림 효과를 갖도록 하는 포장 (Textured Pavements)도 물리적 규제 방법중 하나이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 플래시를 터뜨리는 스트로보 조명이 작동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DFS(Driver Feedback Sign: 가변 속도표출기)를 설치를 확대하여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동시에 확인하여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

국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7일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및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생활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자신이 그 지역의 주민이고 자신의 아이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라는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 Nebraska주 Omaha시 캠페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Grassroots education campaign"을 미국전역에 퍼뜨렸으며 "Keep Kids Alive, Drive 25", "No Need to Speed" 등의 슬로건을 내세워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16% 감소하였고 Omaha 시의 75%의 운전자는 "Yard sign" 이 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린이 안전에 관련한 문제는 안전시설 설치를 돕는 제공자와 당사자인 어린이, 그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어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인 정책이 교통사고 제로로 가는 길일 것이다.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소비와 고용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등 물가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으나, 생산의 위축, 수출·입 등 대외거래 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 실물지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또한 물가상승세가 다소 완화되고는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2011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4월 들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편, 최근 세계경제는 고유가 지속, 주요국 경기둔화 소지, 유럽 재정 위기 재부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으로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시는 인플레이 심리 차단 등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고용 및 경기 회복세의 유지와 시민 체감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강화, 내수 확충 등 경제체질 개선과 함께 성장기반 확충노력을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

-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2011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3월까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4월 들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생 산

- 2011년 4월 산업활동은 화학업체 등의 시설 정비·교체, 일부 부품조달 차질 등에 따른 조업축소로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소 비

- 2011년 4월 민간소비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부문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백화점, 농수산물 등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소비심리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 용

- 2010년 4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월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대비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업자 수가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동일하다.

물 가

- 2011년 4월,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집세와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과 석유제품의 가격하락에 힘입어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다.

금 융 시 장

- 2011년 5월,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 주요국 경기 지표의 부진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였다.

대 외 거 래

- 2011년 4월, 수출은 전월대비 철강금속제품과 생활용품 등이 줄어 감소하였고 수입 역시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등이 줄어 감소하였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감소세이다.



반짝이는

대전발전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공모

- 응모기간 : 2011. 7. 1 ~ 11. 30
- 제안분야 및 내용
 - 경제분야 :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환경분야 : 대전광역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 사회분야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 명성분야 : 종합적으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 선정 및 상금
 - 최우수상(분야별 각1명) :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우수상(분야별 각 1명) :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등록방법
 -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
 - '시민의소리/제안합니다' 코너 활용(www.djdi.re.kr)
 - ※ 제안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바람
 - ※ 형식제한 없음(자유형식, 첨부파일 활용)
 - ※ 로그인을 하여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문 의 : 지속가능성조사센터 방정희 042-530-3566